

민주노총, 격렬 총파업 예고

18일 총파업 결의 “내년 최저임금 사실상 삭감” “최저 임금 1만원 파기, 文사과로 끝날 게 아냐” 주최 측 추산 700여명 참석...민주당사로 행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 등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계획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힘을 기울여 노동계약과 노동탄압에 맞서고 노동 기본권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해찬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까지 행진을 진행했고 경찰 병력이 당사 진입을 가로막자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노동계약 저지·노동기본권 쟁취·비정규직 철폐·재벌개혁·노동탄압 분쇄·최저임금 1만원 파기 규탄 결의대회’에서 “7월 18일 총파업 투쟁은 우리 임금과 고용을 지켜내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우리 복수를 지켜내는 투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자신의 약속을 모두 파기했다”며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은 사실상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환경과 고용상황, 시정수용성 등이 최저임금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인상을 결정 다음날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까지 언급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집권여당과 정부가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며 “저들이 계약과 공격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앞을 중심으로 약 1만명이 운집하는 총파업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18일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날이다.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이날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 만의 약속이 아니었다. 지난 대선 때 5명의 후보가 모두 약속한 사회적 합의”라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송구하고 죄송하고 사과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재벌개혁과 적폐청산,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 등을 약속했지만 지킨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며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계약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당계 투쟁하고 승리하자”고 복

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후 3시30분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에 나섰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당초 경찰은 15일과 16일, 18일 국회 앞 등 일부 구간에 대해 민주노총 행진을 불허했고 민주노총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 이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5일과 16일 행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반면 18일 행진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임시회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국회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와 “집회 예정(신고)인원이 2만명에 달해 질서유지에 상당한 어려움” 등이 예상되며 기각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자신의 약속을 모두 파기했다”며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은 사실상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환경과 고용상황, 시정수용성 등이 최저임금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인상을 결정 다음날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까지 언급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집권여당과 정부가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며 “저들이 계약과 공격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앞을 중심으로 약 1만명이 운집하는 총파업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18일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날이다.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이날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 만의 약속이 아니었다. 지난 대선 때 5명의 후보가 모두 약속한 사회적 합의”라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송구하고 죄송하고 사과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재벌개혁과 적폐청산,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 등을 약속했지만 지킨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며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계약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당계 투쟁하고 승리하자”고 복

에 대해 민주노총 행진을 불허했고 민주노총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 이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5일과 16일 행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반면 18일 행진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임시회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국회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와 “집회 예정(신고)인원이 2만명에 달해 질서유지에 상당한 어려움” 등이 예상되며 기각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자신의 약속을 모두 파기했다”며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은 사실상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환경과 고용상황, 시정수용성 등이 최저임금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인상을 결정 다음날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까지 언급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집권여당과 정부가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며 “저들이 계약과 공격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앞을 중심으로 약 1만명이 운집하는 총파업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18일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날이다.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이날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 만의 약속이 아니었다. 지난 대선 때 5명의 후보가 모두 약속한 사회적 합의”라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송구하고 죄송하고 사과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재벌개혁과 적폐청산,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 등을 약속했지만 지킨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며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계약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당계 투쟁하고 승리하자”고 복

부는 오후 3시45분께부터 ‘탄력근로제 법안 폐기, 최저임금 1만원 민주노총 요구서’를 들고 당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혔다. 지도부를 제외한 집회 참가자들은 “이해찬 나와라”며 연좌농성을 벌이며 뒤를 받쳤다.

민주노총 측은 “당 대표와의 면담 성사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란다. 답이 없다면 (길을) 열고 들어가겠다”고 밝히 한때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자신의 약속을 모두 파기했다”며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은 사실상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원주의 기쁨 2019 제16회 노스페이스 대한민국 희망원정대 원주식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원정대원들이 모자를 하늘로 던지고 있다.

‘미세먼지·오존 유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 강화

내년부터 미세먼지·오존 유발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더 까다로워진다. 환경부는 오는 16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VOCs를 배출하는 전국 사업장 1640곳에 대한 시설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VOCs는 굴뚝 외 다양한 시설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서 대기 중에서는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된다.

우리나라의 VOCs 배출량은 2010년 87만에서 2015년 92만으로 증가했으며, 원유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문이 전체 VOCs 배출량의 7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원유정제시설 등에서 배출이 많은 저장탱크의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상지붕형 저장탱크까지

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고정지붕형 저장탱크만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외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와 자동환기구 등에서 VOCs 누출 여부도 상시 관측하도록 했다.

냉각탑에 연결된 연교환기 입·출구의 총유기탄소 농도 편차는 1ppm 또는 10% 미만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플레이어스택의 평시와 비정상 시 관리 기준을 높였다.

평시에는 연소부 발열량을 2403kJ/Sm³ 이상으로 유지하고, 광학가스탐지(OGD)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 VOCs 누출 여부를 상시 관측하도록 했다. 비정상 시의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을 40%로 설정하고 사업장의 폐쇄회로(CCTV) 설치와 촬영 기록을 적도록 의무화했다.

강화된 시설관리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기간 시설 개선

을 요하는 플레이어스택 발열량 기준은 2024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전국 페인트 제조·판매업체 5733곳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 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 대상 페인트를 현재 61종에서 118종으로 57종을 추가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제조·생산된 페인트에 적용된다. 단, 계약에 따라 제작되는 선박용 도료의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계약한 선박·해양구조물에 사용하는 페인트부터 적용한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VOCs는 그 자체로도 유해하지만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방면의 저감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정유·석유화학 사업장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에서 전체 VOCs 배출량의 15%인 약 15만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9월부터 발급

이르면 올해 9월부터 별도의 국제 운전면허증이나 공증 서류 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도입될 전망이다.

1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후면에 영문 정보가 병기된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운전자는 별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한국 면허증과 번역공증 문서를 별도로 소지하는 형태로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이 도입될 경우 운전자는 해당 면허증 하나만 갖고 있으면 특정 국가에서 렌트 등 차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영문 정보는 면허증 뒷면에 영어로 이름, 주소, 성별, 발급일자 등이 적히는 형태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면허증 뒷면에 기재사항 변경 내용이 담겼던 부분이 교체되는 식이다.

또 국외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운전 가능한 차종은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된다.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은 현재까지 호주, 뉴질랜드, 괌, 캐나다 일부, 덴마크, 영국, 터키, 핀란드 등 35개국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논의 등 과정에서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늘어날 수 있다.

뉴스

이런판결 저런판결

‘세습논란’ 명성교회서 40대 신도 난동...1심 법원 벌금형 내리

교회 예식장 의식취폐 사업하려다 거절에 앙심

부자 세습 등 논란이 일었던 명성교회에 들어가 지속적으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투자회사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지난 4일 폭행·폭행치상·예배방해·협박·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2017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약 7000명의 신도가 있는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예배당에서 김성환 목사에게 “네가 목회자냐, 정신차려”, “여기가 흡혈통이나 무슨 예약하는 자리냐” 등을 외치며 수차례에 걸쳐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10월 22일 교회 앞에서 김 목사를 향해 “원수를 사랑하라면서 성도를 고소하냐”라고 소리치던 중 교회 직원 A씨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두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쳐 약 4주 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박씨는 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자 투자사 대표로서 교회 예식장에서 의식취폐 사업을 하기 위해 당회장인 김 목사를 만나려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교회 관계자들이 나를 억지로 끌어내 이복을 끌었을 뿐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폭행치상 혐의는 A씨가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나 당황한 나머지 밀친 것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판사는 “박씨가 폭행 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수차례 반복적으로 예배를 방해해 교역자·교회 직원 등이 피해를 입고 수천 명의 교인들이 불안감을 느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도 상해 결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으며 박씨가 교회측에 금전적 보상을 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밝혔다.

사건이 일어난 명성교회는 등록 교인 10만명이 넘는 대형교회로 2017년 신도들의 거센 항의를 무릅쓰고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2대 담임목사로 사실상 확정하면서 부자세습이라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이 교회 교인인 김충환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도 교회 앞에 걸린 세습 반대 현수막을 자르려고 낫을 휘두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제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제치료, 발달치료, 영진 민력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구강 검진
- 암 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